

촛불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진걸 _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 들어가며: “촛불항쟁, 시민사회운동에 깊은 울림을 주다”

5월 2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그 촛불을 어찌 잊으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촛불항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어서 각계각층,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불타올랐다. 촛불항쟁이 준 감동과 충격은 아직도 매우 생생하다. 지금도 촛불은 인터넷에서, 생활에서, 부문에서 타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25개구 곳곳에서 지역 촛불로도 이어지고 있다. 촛불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무엇보다도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에 전대미문의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기존의 사회운동 진영은 이른바 ‘활동가’와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변화를 준비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촛불항쟁의 발발과 진행은 철저하게 평범한 시민·네티즌들이 준비했고, 사실상 주도했다. 기라성 같은 사회운동단체들도 못하는 일을 ‘뽄뽄이 흩어져 있는 무관심한 개인’이라고 치부되던 시민·네티즌들이 해낸 것이다. 지금 모진 권력의 혹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촛불은 이미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유무형의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일궈낼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운동뿐만 아니

라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촛불 문화제 및 가두행진 현장에서 시민·네티즌들은 시민사회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항쟁을 일궈냈다. 인터넷, 휴대폰, 생중계 등으로 촘촘히 연결된 시민들이 있어서 이 대항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학생·네티즌들의 힘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혜와 경험이 굳건히 결합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번의 촛불대항쟁이 가능했던 것이지만, 촛불대항쟁 전 과정에서 시민·네티즌들의 주도성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사회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된 참여민주주의 사회로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사회단체와 헌신적인 리더들 중심의 참여민주주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의 촛불항쟁은 확연히 달랐다. ‘국민주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온전하게 이해한 평범한 시민들의 붓물 같은 참여가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촛불항쟁이 거둔 가장 큰 승리일 것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 ‘국민지성’의 놀라운 힘이 발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추가협상을 이끌어낸 것도 촛불의 성과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경부운하 백지화,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 백지화 같은 것도 이끌어냈고, 방송독립 사수, 언론개혁, 비정규직 문제 같은 이슈들이 일반 국민들과 만나게 된 점도 큰 성과이다. 문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정권이 약속한 것도 다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 정권이,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극소수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에 여념이 없는 것에 국민적 분노가 다시 높아져

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모이기 시작한 자발적 촛불은 온-오프라인 과정에서 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각성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의 나쁜 본질과 못된 정책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서 사실상의 범국민 민주항쟁의 성격까지 띄게 됐던 것처럼, 제2, 제3의 범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촛불항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예전처럼 매일 대규모로 촛불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여러 방향에서의 다양한 고민과 참신한 기획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제2, 제3의 범국민적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에서는 동네 촛불과 각종 사회참여커뮤니티가, 중앙에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탄생하였다.

2. 촛불항쟁을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반성

촛불대항쟁의 발발과 진행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한 상근자로서 많은 반성과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네티즌들의 붓물 같은 참여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에도, 한편으로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시민·네티즌들의 참여와 감성에 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측면에서 낙후되고, 무능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당수 시민·네티즌들은 시민사회단체라는 틀을 통해 촛불항쟁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과 활동은 적극 존중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실무적 주관을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던가. 평범한 시민·네티즌들은(시민사회단체들의 요란한 깃발과 잘 만든 피켓과는 다른)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소박한 종이 한 장과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을 준비했고, 그것이 국

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그렇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어느덧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상상력을 잃고 관성에 젖어 있었다. 수많은 이유로 바쁜 시민사회운동이지만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전혀 바쁘지 않았다. 각자의 단체가, 각자의 활동가가 최선을 다해왔다는 항변이 그래서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나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5월 2일 스스로 폭발했는데도, 그러한 조짐조차 모르고 있었겠는가. 좀더 혹독하게 말해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는 다른 길에서만 바쁜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운동’은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정한 후진성과 오랜 관성을 고백함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데는 인색해서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었다. 특히 나눔문화, 진보연대, 다함께, 민변, 민연련과 함께 생활협동조합, 급식개혁 관련 단체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했다. 생협 관련 단체들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 생산과 소비체계의 대안 구축을 위한 노력은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제 시민사회운동에서의 화두는 촛불항쟁에 비추어 ‘시민사회운동, 무엇을 혁신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이어야 한다. 특히, 보통의 시민·네티즌들과 무엇을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할 것인가가 최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고받으며, 거리를 좁히면서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총체적 저항과 투쟁,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또 하나의 화두이겠지만.

3. 촛불항쟁이 남긴 숙제 하나

촛불항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질 높은 참여민주주의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시민·네티즌들의 폭발적 토론과 참여가 이번 촛불대항쟁의 동력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공간에서 어떤 시점부터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엄청난 토론과 참여의 동력이었던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서 오히려 토론과 참여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촛불항쟁의 동력의 소진에도 일정한 원인을 제공했다.

배타적 태도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난무하는 ‘프락치’론이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촛불 문화제 공간에서 좀 다른 주장을 하면 바로 프락치로 몰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알바’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소박하기라도 하지만, ‘프락치’론은 이견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배타적인 형태의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촛불항쟁이 준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다원성·다양성 보장과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 신장이 참여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아름다운 민주 사회가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는 주체화를, 동료 시민들과는 연대화를 꾀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대중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촛불시민들의 자발적 주체화와 소통적 연대화는,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종합예술을 보여주었다. 또 이번 촛불항쟁은 탈조직적 사회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핸드폰, 디카, 인터넷 등의 첨단 디지털 문명이 사회운동과 연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정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맥이 닿지 못하는 사회운동은 그들만의 운동으로 전락

해 감동을 잃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과 운동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사회운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또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인터넷-네티즌 기반 사회운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목해야 할 것이다. 굳이 사회운동이라고 일컫지도 않을, 시민·네티즌들의 뜻있는 참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됐고, 그것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시민사회운동의 혁신과 활성화의 관건이 됐다는 얘기가.

4. 광범위한 성찰로 시민사회운동 혁신과 활성화를 꾀하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일반 시민·네티즌들은 시민사회운동을 여전히 너무 멀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각인해야 한다. 촛불항쟁을 통해서도 그것은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많이들 ‘시민운동이 큰 위기’라고 이야기했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참여통로의 다양화 △1인 NGO(UCC)의 출현 △참신성의 약화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과 정당정치의 변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의한 개혁의제의 흡수 △새로운 의제 발굴 저조 △시민운동 반대 세력의 점증 △수구냉전 언론과 기득권세력의 집요한 흠집내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관심 저하 △시민운동의 관성적 활동 △과도한 영향력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점 △넓은 의미의 진보·개혁세력의 전반적인 부진 등등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의 모진 탄압도 겹쳐 있으니 시민사회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서 외양상은 시민사회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내재돼 있는 시민사회운동의 위기와 정체의 원인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사회운동의 본질적인 위기와 정

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의 시민사회운동의 위기와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바로 “‘시민사회운동’과 ‘시민’의 거리가 여전히 너무 멀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인데도 ‘시민’과 거리가 멀다니 이것보다 더 큰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거기에는 △‘시민운동’과 ‘시민’의 거리(총체적인 관계의 문제) △시민운동의 ‘의제’와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의 ‘태도’와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의 ‘정서’와 시민과의 거리 △시민단체 ‘운영’과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 수단과 시민과의 거리 등이 있다. 또 시민사회운동과 시민들을 둘러싼 소통·교육·언론의 문제 등도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 작금의 시민사회운동 현실 진단

최근 몇 년간 시민사회운동은 확실히 정체 국면이었다. 나아가 시민사회 안팎에서 ‘시민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진단이 계속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심화, 인권 신장, 복지·생태사회 지향,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다방면에서 치열하게 활동해 왔던 시민운동의 역사를 보면 최근 시민운동의 ‘정체와 위기’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올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활발하게 싸우고 있는 외양과는 달리, 한국 사회를 변혁해 가는 열정의 집적체로서, 보통 시민들의 변혁과 참여 열망의 통로로서의,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확실히 정체 국면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위기의 와중에도 치열하게 활동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고 새로운 의제와 영역을 발굴하고 개척하는 모범 사례들도 있다. 또 ‘언제는 사회운동이 위기가 아닌 적 있었냐’며 ‘사회운동 위기 담론의 과잉’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치열하게 모범을 만드는 단체들과, 필요 이상의 위기 담론이 오히려 ‘사회운동을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의 요

체를 심분 고려한다 해도 몇 년간의 ‘정체와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 시민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 시민운동의 새로운 의제 설정이 부진하다는 점, 시민사회단체마다 회비와 회원의 감소나 정체가 눈에 띈다는 점(이 정권 들어서서 늘어난 단체도 일부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상당수 활동가들이 스스로 정체와 위기를 시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많은 여론 조사들이 있다. 여론 조사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 시민사회 관련된 여론조사들의 결과가 대부분 비슷하기에 조사의 신뢰도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최근의 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6개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100점 만점 기준) 조사에선, 국회(16위)와 정부(중앙정부 15위·지방정부 14위), 청와대(13위)가 나란히 최하위로 나타났다. 3년 전과 순위도 똑같았다. 금융기관, 의료계, 학계가 84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다. 또 대기업(11위→7위)과 금융기관(6위→1위), 군대(8위→4위) 등은 신뢰도가 높아진 반면에 3년 전 1위였던 시민단체는 6위로 떨어졌다.”(한겨레신문 2007년 5월 24일, ‘성균관대 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소개’ 기사 중)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20~30대 성인남녀 1209명을 대상으로 사회 각계의 신뢰점수를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평균 44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 신뢰점수는 예술가가 5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계 51.8점, 의료계 51.3점, 시민단체 50.6점, 경제계 46.3점, 교육계 44.9점, 법조계 44점의 순이었다. 가장 신뢰점수가 낮은 집단은 정치계로 17.4점을 기록했으며 종교단체(36.9점), 공무원 집단(39.5점)도 평균을 밑돌았다.”(경향신문 2007년 4월 9일, ‘20~30대 한국사회 신뢰도 43.9점’ 기사 중)

“지난해 말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는 전국 성인 남·여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을 두 개씩 선택하게 한 결과, 언론을 선택한 이는 전체의 39.2%로 ‘대통령과 청와대’(25.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나라당’과 ‘법조계’는 각각 23.2%, ‘시민단체’는 19.7%에 그쳤다.”(국정브리핑 2007년 6월 8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 결과’ 기사 중)

이외에 2008년도의 여러 조사에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영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덕성과 순수성, 적절한 문제제기로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성장해 왔던 시민운동의 역사를 본다면 최근 시민단체의 신뢰 저하는 걱정할 만한 수준이다. 최근의 환경운동연합 사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수구냉전기득권 언론 등의 의도적 공격과 왜곡, 국민의 의견이 분분한 분야에서 탈냉전·생태주의·소수자 인권 지향의 사회를 위해 여론의 역풍을 무릅쓰고 확실히 자기 목소리를 낸 점, 시민단체 외에도 다양한 참여통로가 활성화된 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시민사회운동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을 내려 보겠다.

2) 시민운동의 현황 진단 하나: ‘시민운동’과 ‘시민’의 거리가 너무 멀다(관계의 문제)

누가 뭐라 해도, 그동안 시민운동의 역사는 ‘고행’의 역사였다. 지금만큼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지난날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70~80년대의 민주·민중운동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이 문제 많은 한국사회에서 지금만큼의 인권·복지·투명성을 실현하는 데 90년대와 2000년대의 시민운동의 기여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낮은 급여와 복잡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운동의 정진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과감하

게 스스로를 성찰과 혁신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시민운동의 '의제'와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이 시민과 너무 멀리 있다’라는 엄연한 현상을 주체적으로 비
판해 보면, 시민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치열함과 진정
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두들 좋은 뜻을 가지고 모였지만, 최근
시민운동이 민중·서민으로서 고통 받는 시민들과 얼마나 함께했는지, 제대
로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의 많은 발전에도 불
구하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수백·수천 가지의 문제가 있다. 대
표적으로 부동산·집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도 시민운동은 풀지 못했다. 그 문제에 대한 경실련의 대응과, 1가구1주택
국민운동과 그에 이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의 대응은 후한 점수를 주어
야겠지만, 수백 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호소하는 과도한 신용카드사의 수수
료 문제에 적극적인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인 교육-교육비 문제는 교육단체들만의 일로 맡겨 놓은 지 오래였다. 등
록금 문제에 모범적으로 대응해 온 등록금넷은 예외로 하더라도 대다수 국
민들의 최대 관심사를, 전문 분야 단체들에게만 맡겨 놓은 것이 맞는지 이
제는 성찰·논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8백여 만 명에 이른다는 비정규직
문제, 720여 만 명에 이른다는 금융소외자 문제도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비주류 이슈이다. 시민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중교통 이
용의 문제, 아파트 공간에서의 삶의 문제, 각종 공공서비스(요금)의 문제,
핸드폰 등 정보·통신 분야의 문제에 누가 천착하고 있는가? 몇몇 단체가
애를 쓴 것까지 무시하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 전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초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운동
의 여러 의제들에 대해 시민들은 당연히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
들은 시민단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
통의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

시민운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 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에 대해서 시민운동은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때, 촛불 시민들은 그것을 놀라운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바로 그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2) 시민운동의 '태도'와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과 시민의 거리 발생은 의제 설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시민운동의 '태도'에서도 많은 거리가 발생한다. 시민단체들이 그 많은 시민들의 억울한 이야기, 하소연, 고충 호소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이건 '내 문제다, 우리 문제다'라며) 함께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일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고충민원 또는 국민제안 사이트에는 1년에도 수만 건의 글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시민상담을 활성화하거나, 각종 제안이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코너나 그 해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만 1년에 2만여 개의 시민제안이 접수되고 있고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도 개통한 지 2년 만에 수만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당연히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체계와 태도만큼은 때로는 시민단체들도 배워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심지어 찾아오는 시민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귀찮아하고 꺼려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도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서 그러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제안과 목소리를 귀찮아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민운동이 아니다'라고 감히 비판받을 것이다. 인터넷 주요 공간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글만 잘 모니터해도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거리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단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사무실에 동네 사람들과 시민·네티즌 등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단체의 문턱은 여전히 멀고도 높다'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컷가에 생생하다.

(3) 시민운동의 '정서'와 시민과의 거리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어떠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게 운동을 위해서겠지만, 주로 기자·언론인, 정·관계 인사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 후원자들, 동료 활동가들일 것이다. 만남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만남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만큼 서민들을, 보통의 시민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보통의 서민이나 시민과의 '정서적 공감대'도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평범한 이웃들과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의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 많이 만나야 보통의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에 대해서, 시민운동에 대해 요청하는 바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사실 가장 자주 만나야 하는 대상은 네티즌들이다. 인터넷-네티즌 기반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운동은 네티즌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아고라에 글을 올리는 것이 네티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네티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을 풀가동하면서, 네티즌들과 쌍방향 소통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른바 '넷심(네티즌들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촛불항쟁 때 네티즌들로부터 술하게 들은 이야기가, 광우병 대책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넷심'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4) 시민운동 '운영'과 시민과의 거리

시민운동과 시민과의 거리에서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민단체 운영과 시민과의 거리이다. 시민운동에 시민들이 없다는 수구냉전 기득권 신분들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하면서도, 정반대로 시민운동에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들이'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관에 회원참여 규정이 있고, 운영비의 상당수를 시민들이 후원하고 있고,

자원활동가들이 수십·수백여 명이며...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물어야 한다. 주요 시민단체의 의사결정과정, 문화, 소통 방식은 어떠한가. 시민들은 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거의 100% 중요한 결정은 이른바 교수·변호사·활동가·고액 후원자 등 '전문가 집단'의 고유영역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성찰해 볼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되면서 그 많은 훌륭함과 선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과 시민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진실이 자리잡아 버린 것이다. 네티즌들이 그런 시민단체에 애정을 가질 리가 없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촛불 항쟁 이후 기존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자신들만의 단체와 카페 등을 우후죽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시민단체 재정 문제 역시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면서 소액다수 후원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한 대안이 될 것이다.

(5) 시민운동 '수단'과 시민과의 거리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란한 깃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참가자가 적어서 차로를 줄여서 행진할 수 있는데도 넓은 차로를 행진하는 것에 아주 불쾌해 한다. 집회나 토론 시 나오는 운동권 용어들에 대해 매우 많은 거부감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단체 이름부터가 생경한 경우가 많다. 열린 공간에서 대회를 여는데도, 내부 단합대회처럼 '동지'를 남발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진다. 사람은 적는데 운동가요를 아주 크게 틀어놓은 경우도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해라체'의 구호와 사각형의 피켓이 거의 전부인 기자회견 문화도 때론 식상하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다. 시민사회운동의 수단과 외양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는 거리감과 부담감, 그리고 거부감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무엇이 그리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지 못한단 말인가. 마음먹고 고쳐보자.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도 의사소통형 집회, 의사소통형 표현, 의사소통형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권력에만 요구할 일

이 아니다.

(6) 평범한 이웃들과 '시민운동'에 대해 말해보자.

시민운동의 위기는 이처럼, '시민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시민들과의 거리'가, 흔히들 시민운동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시민단체의 영향력 축소',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응력 부족', '새로운 이슈 발굴 미흡', '비판·반대세력의 증가', '시민단체 운영의 어려움'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걸 보통의 시민들에게 '시민단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도 그러했는데, 그것이 위기의 원인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봐야 한다. 이른바 '잘 나갈 때'는 객관적 상황의 호조 속에서 이 중대한 '주체'의 문제가 가려져 있었으나, 객관의 변화 속에서 문제와 위기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파악해야 한다. 길거리 나가서, 아니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 만나서 시민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자. 제일 짜증나는 것, 힘든 것,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고통스러운 것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시민운동의 위기극복, 거기서부터 함께해야 한다.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짜증, 분노(물론, 시민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 여러 공통분모가 있고 정당한 분노가 있다)와 전면적으로 함께해야 한다. 아니 '함께한다는 것'도 '건방진' 표현이다. 그냥 시민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또 같이 문제제기하고 호소하고 제안하고 발로 뛰는 시민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시민운동의 현황 진단 둘: 시민운동이 시민들 속에서 학습되지 않고 있다(교육의 문제)

(1) 시민운동의 위기는 중첩돼 있다.

시민운동과 시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위기의 원인에 이어 한국 사회운

동의 역사와 그를 계승한 시민운동이 시민들 속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교육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시민운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모태가 된 5월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동시대 시민들의 혼란도 여전하다. 5월 민중항쟁을 부정하는 여론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참배를 거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4·19혁명을 부정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 그룹까지 나타났다. 바로 뉴라이트가 그들이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4·19,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친일·친미·군사독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필자의 '선부른' 결론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2개의 설문결과를 보겠다.

“5·18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2%는 ‘폭동’, 6.7%는 ‘사태’라고 답하는 등 전체 16.9%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2007년 5월 5·18재단 국민 1,500명 조사 결과)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5·18의 성격을 제대로 아는 응답자는 1.2%에 그쳤고 중학생은 4.0%, 고등학생 12.0%만이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5·18이 발생한 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응답자의 9%(전국 2.1%)인 155명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은 3·1운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17.2%가 정확한 응답을 했을 뿐 4·19혁명 2.8%, 5·16쿠데타 0.8%, 6월 항쟁 3.8% 등으로 인지도가 낮았다.”(2004년 5월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초·중·고생 1만 3천 867명 조사 결과)

그런 혼란 속에서 2007년에 6월 항쟁 20주년이라고 이런 저런 행사나 기획이 여기저기서 참 많았다. 토론회 하고 의의도 밝히고, 계승하자는 다짐도 하고 계승의 과제도 밝혔다. 그런데, 그런 기획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행사들의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들이 6월 항쟁의 계승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의 참다운 계승은, 적어도 그날을 잘 모르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깨달음이 되고, 공명이 되는 그런 계승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래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의 20대, 10대가 앞으로의 20대, 10대가 잘 모르고, 공감하고 공명하지 못하는 6월 항쟁이라는 것은, 그 계승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많은 평화와 복지를, 더 빠른 통일과 해방을 가져와야 할 몫은 지금의 청년·소년·아동 세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2) 항쟁의 계승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와 만나야 한다.

이 같은 중첩된 시민운동의 위기 국면에 시민사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더 이상 대학, 야학, 교회, 사찰에서 각성된 시민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음도 각인해야 한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야 하고, 직접 학생사회·대학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항쟁도 계승되고 시민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간의 참여연대의 ‘시민운동 청년연수 프로그램’과 ‘기획 강좌’는 좋은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강좌 프로그램과 좋은 글이 담긴 이메일 뉴스레터로 꾸준히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교육에 성심을 다하는 인권연대의 경우도 배워야 한다. 많은 단체들이 회원·회비가 줄어든다고 하는 근래에도 인권연대의 회원과 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좌와 시민교육에 결합한 시민들의

경우, 사회참여 의식이 제고되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 한다. 또 질 높은 강좌사업과 대학생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하는 나눔문화의 활약도 주목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사 '나눔 연수', 인권 연대의 교사 '인권 연수'도 참조해야 한다. 교사가 깨달아야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사회와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각 대학마다 교양과목으로 '시민사회와 NGO', 'NGO와 사회운동', '인권과 평화' 등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제안하고 대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제안배경을 잘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하고 각 대학 교양과목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민교협, 학단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 대학 측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먼저 노력해 '1시민단체-1대학 책임지기'같은 형태로 인연을 만들 필요도 있겠다. 그 교양과목이 개설된 대학의 학생들은 그나마 그 수업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계기를 가지게 된다. 시민사회를, NGO를 공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복지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으로 그 것이 바로 항쟁의 계승이고 연속이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했던 국민대, 성공회대, 한성대 학생들은 그 교양과목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교양과목도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또 틈만 나면 대학사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 동아리 등과 연계해서 특강 등도 활발하게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교·대학마다 NGO 동아리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자원활동 프로그램 강화는 기본이다. 이런 일들을 대학생에게 맡겨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예전엔 대학생들이 '좋은 교양과목' 개설투쟁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 시민사회가 대학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들을 찾아가

면서 만나야 할 때라는 의미이다.

(3) 시민운동의 위기 극복, 시민교육·시민소통 활성화에서 시작하자.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배투사들과 민중들의 숭고하고도 엄청난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에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제도가 너무 일상적인 것이어서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모르기에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공부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없다면 후배세대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상의 참여와 감시 없이는 일상의 민주주의도 없다고 했는데, 누가 참여하고 감시해야 하는가. 6월 항쟁 세대가 천년만년 살아서 감시하고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 느낌을 드높이기 위한 여러 기획에도 돌입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들이 다 같이 기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의제는 널리고 널려 있다. 왜 시민운동은, 최근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불만합창단’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시민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권력 감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병행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관심과 소통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미래세대는커녕 민주주의 항쟁을 경험한 세대들까지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냉소를 느끼고 있다면 이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야 할 일이다. 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만남과 소통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소중함과 의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상화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시민들의 재교육·평생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인권과 복지, 정의와 평화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5·18이나 6·10항쟁은 또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교육이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시민단체들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양강좌에도 ‘시민사회와 NGO’, ‘NGO-NPO 활동’을 배우는 교양이 포함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활성화가 항쟁의 계승과 시민운동의 위기 극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현재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서 시민과의 만남, 소통,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 것이다. 최근의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의 증진이 그나마 시민사회에 큰 위안을 주고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공간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시민운동의 현황 진단 셋-시민운동을 제대로 대변하는 언론이 없다(언론의 문제)

(1) 관계·소통·교육 문제의 중심에 선 ‘언론’

지금까지 시민운동의 위기와 관련해 관계·소통·교육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런데 관계·소통·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일 것이다. 위에서는 주로 시민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내부적인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시민운동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공격하는 언론환경이 시민운동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시민운동이 시민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매개체’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매개체가 건강해야만 시민운동과 시민 사이의 관계·소통·교육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변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만, 이명박 정권하에서 수구적인 언론 환경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더더욱 언론 문제에 착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네 가지 대응으로 ‘언론’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는 언론개혁 의제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며 언론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언론개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도 신문시장은 수구냉전·개발과파·특정종교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90%가 그런 신문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답답하고 끔찍한 일인가. 언론 영역에서 신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왜곡된 여론과 공격으로 시민사회의 가치와,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언론개혁’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굳게 세워야 한다. 촛불항쟁을 통해서도 이 수구언론의 문제점은 만천하에 다시 드러났다. 그대로 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이 지금 방송까지 진출하려 하지 않는가. 정권은 또 방송장악에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과 같은 대응은 너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둘째, 대안언론을 만들어 키우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어떤 매체라도 좋다. <시민사회신문>에도 더 큰 관심으로 함께해야 한다. 국회전문지 <여의도통신>도 주목하자. 인터넷 대안언론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자. 대안 매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매체의 기자들부터 귀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걱정했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도 서서히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부터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이 생기겠는가. <한겨레>도 그렇게 키워내지 않았던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다면 제2, 제3의 <한겨레>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또 대안매체를 키워나가는 과정과 함께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민중의소리>처럼 민주주의·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매체들이 지금보다 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을 대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로 신경 써야 한다. 그 매체들의 독자배가운동에 동참해야 함은 기본이다.

셋째, 시민단체들이 모두 자체 사이트나 기관지 등을 키워서 작지만 강한 대안언론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마다 사이트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더 투자해야 한다. 더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야 한다. 뉴스레터도 더 정성껏 만들자. 뉴스레터 신청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뉴스레터가 인기가 좋다. <인권연대>의 뉴스레터도 참조하자. 기관지도 마찬가지다. <녹색평론>, <인물과사상>, <작은책>, <삶이보이는창>처럼 좋은 잡지를 시민단체들도 만들어 가면 좋겠다. 또 최근 시민단체, 지역단체들이 라디오 방송을 늘려나가고 있다. 너무 좋은 일이다. 작지만 소중한 대안언론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난다면, 그러한 개미들의 연합체가 언젠가 ‘조선일보’같은 신문시장의 수구괴물을 무너뜨릴 날도 올 것이다.

넷째, 인터넷에서 네티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민언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음 아고라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 것이다. 최근 아고라에 ‘네티즌과의 대화’라는 코너가 생겼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널리 알려야 할 일이다. ‘블로그·카페·홈피·뉴스레터 등을 잘 가꾸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상투적이다. 그런 것은 기본일 테고, 어떻게 네티즌들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과 직접 소통하는 수없이 많은 공간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시민언론’이 될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 제대로 된 혁신과 활성화가 촛불에 대한 예의

이상의 글은, 2007년 초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상황에 대한 필자의 메

모를 바탕으로 씌어진 글이다. 정교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주장이 다분한 글이다. 하지만, 촛불항쟁을 통해서 시민사회운동과 일반 시민·네티즌 사이에는 많은 거리와 이질감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거리와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기획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명박 정권의 거둬들인 실정과 잘못된 정책은 시민사회운동의 투혼과 분발을 부르고 있다. 시민·네티즌의 자발적 운동에도 한계가 많다. 조직적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분투와 자발적 시민·네티즌의 참여가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운동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운동이 시민·네티즌과의 거리가 발생한 이유와 원인, 현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파악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글은 다만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필됐다. 또한 누구를 지적하고자 쓴 글이 아니다. 여기에 나온 글들은 모두 필자 자신을, 필자가 속해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향한 고언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운동은 그 무엇보다도 ‘의사소통형’ 시민사회운동이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제대로 된 혁신과 활성화가 촛불항쟁과 촛불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안진걸(Ahn, Jin-Geol) ngo8518@pspd.org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